

민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 발의

코바나 협찬의혹도 겨냥

‘단독 후보자 추천’ 규정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총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의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내용상의 교집합을 최대화함으로써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특검 도입 속도를 높이는 데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내려는 전

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의당도 ‘검찰 수사 우선’을 주장하다 지난 7일 방향을 틀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다.

정의당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온 조항인 만큼, 앞으로 이른바 ‘쌍특검’의 공조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내용과 관련해서는 계속 열어 놓고 정의당의 의견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원팀’ 내부결속

김기현호 취임 첫날

총선·윤 정부 성공 강조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당정 원팀’ 메시지를 발신하며 내부 결속에 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첫 마디로 “1년 전 오늘 위대한 우리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다”며 “그 뜻깊은 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꼽으면서 이를 위한 당내 화합과 단합을 주문했다.

신임 최고위원들도 앞다퉂 ‘당정 단일대오’를 향한 각오를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전체를 갖춘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생했다”며 ‘혼연일체’ 정신을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우리 모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운명공동체”라며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제는 단연 단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과 화합”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최고위를 주재한 김 대표는 이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뒤 신임 지도부와 오찬하는 등 일정을 당내와 당정 간의 소통에 중점을 맞췄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직후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최고위원들에게도 일부 직접 당선 축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지도부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과의 첫 회동도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16~17일 방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의 방일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연합뉴스

“민생경제 챙기기 집중”
개혁반발·검사정권 숙제

윤 대통령 당선 1주년



윤석열대통령이 9일 당선 1주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다른 기념 행사나 메시지 없이 울산 석유화학시설 기공식에

참석하는 지역 민생행보에 집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행사 자체가 대선 1주년 메시지”라며 “민생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자축하는 것보다,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해 지난 1년을 복기하며 민생을 돌보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자유’와 ‘연대’를 핵심 가치로 앞세워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이어갔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민간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지원을 주문해 왔다. 이를 통해 수출을 다시 일으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교육·연금 등 필수로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 이해관계가 얽힌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 특히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 판단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해법을 최근 제시했다.

내주로 전망되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가시화하고 ‘4월 국민 방미’도 확정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도 더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개혁방향과 속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만만치 않은 숙제로 보인다.

‘검사 정권’이라는 비판을 불러온 인재 풀 한계도 여전한 문제로 지적된다.

아들의 학교폭력에 따른 검사 출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히 상당한 데다, 검사 출신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에 선임된 데 대한 반발 여론도 나온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